

## 시론



오 수 열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동북아학회 이사장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사태가 1주년이 지났고, 이제 명정부 출범 또한 6개월을 맞았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경주AP EC정상화의'와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이 마무리되면서 특검과 내란 재판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고는 있지만 국정(國政)은 상당부분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권분립'이 기본원칙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국정논의의 중심지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입법권을 가진 의회(議會)가 아닐까 싶다.

그 가운데 9월에 시작돼 연말에 끝나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그리고 그간 밀렸던 법안통과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국회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다.

이러한 때에 국회에서 외교와 안보문제를 다루는 외교통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그리고 정보위원회의 활동이 국민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으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자연 상태가 아닌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최종적으로 규율하는 정치(政治)와 그 최종적 목표는 무엇일까?

동서고금의 사상가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定義)를 내렸지만, 필자가 공부한 바를 종

## 정치권, 안보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하면 '사회적 가치(價値)'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이 정치이며, 구성원이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가 아닐까 싶다.

사람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외적 각종 위험요인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데, 국가가 관여하는 내적 위험을 치안(治安), 외적 위험을 안보(安保)라고 한다.

각종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오랫동안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던 미야사마이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치안 만큼은 매우 양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안보의 기본 축이었던 한·미 안보동맹이 흔들리는 가운데, 중·일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 사실화 되는 등 한반도의 안보지형은 매우 불안정해져가고 있다.

우리는 이미 위정자들의 국제정세에 대한

무지(無知)와 안보문제에 대한 무관심 속에 국권을 잃고 36년 간을 식민지 상태에 놓였던 민족이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K-컬처가 세계를 풍미한들, 나라가 전쟁상태에 놓이게 되고 국권을 상실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하여 일찍이 공자(孔子)도 족식족병(足食足兵)이라고 해 정치의 핵심요소로 경제와 함께 안보를 들었던 것이다.

더욱이 현대의 전쟁양상은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된다. 핵무기의 파괴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재래식 무기 역시 엄청나게 발전해 굳이 핵전쟁이 아니더라도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우크라이나전쟁과 중동전쟁이 증명해 주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지금은 제2차 세계대전이 후 냉전시기에 지속돼 왔던 군경간 동맹체제(同盟體制)는 사라지고 오직 자국의 이익에 따른 이합집산 속에서 각자도생(各自圖生) 만이 판을 치고 있다.

미국을 믿고 의지했던 우크라이나의 처지와 중국에 강경하게 맞섰을 때 미국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일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까?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결의를 통해 그동안 국제적으로 인정돼온 '한반도 비핵화' 문제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문제에서 만큼은 줄곧 일관된 입장을 보여 온 중국 또한 북한의 핵 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정부의 입장과 태도는 어떠한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자주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안보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가 아니었을까 싶다.

최근 우리가 재래식 무기분야에서 이른바 방산강국(防產強國)에 들어서자, 북한도 핵 무기 외에 재래식 무기 개발에 국력을 쏟아붓고 있다. 이른바 군사력 증강의 에스컬레이션 현상이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군사밀도(軍事密度)가 높은 지역에서 전쟁위험이 높다는 사실과 대만해협에서 미·중·일의 대결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대한민국의 안보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져야만 하겠다.

## 현장칼럼



최 강 님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장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을 바라보는 시선은 흔히 '부족함'에 머물곤 한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고 또래 관계에서 서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쉽게 '뒤처진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아동들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오히려 우리 사회가 잊고 있던 '느림의 가치'를 알게 준다.

이 아동들은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번 이해하면 끈기와 성실함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간다. 단순 암기보다 반복과 체험을 통해 더 잘 배우고, 작은 성취에도 큰 기쁨을 느끼며 자신감을

## 함께라서 더 단단해지는 성장

쌓는다. 또래보다 관계 형성이 더딜 수 있으나 정서적 공감력이 깊어 친구와 교사에게 따뜻한 울림을 주기도 한다. 빠르게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오히려 이런 꾸준함과 섬세함은 귀한 자질이다.

아동의 성장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빛을 낸다. 과연전문가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체계적 지원이 배움의 폭을 넓힌다면, 가정은 그 성장을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다. 보호자가 특성을 이해하고 작은 성취에도 '잘했어, 네가 자랑스럽구나'라며 격려할 때 아이들은 눈빛이 달라진다. 한 아동은 오랜 시간 연습 끝에 자기 이름을 쓰자, 보호자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고 이후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보호자와 과연전문가가 발달 과정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정에서의 관찰이 과연전문가에게 전달되고, 현장의 변화가 다시 보호자에게 전해질 때 아이는 안정감을 느낀다. 작은 진전이라도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면 아동은 단순한 학습 능력 향

상을 넘어 삶 전반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배운다.

여기에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해질 때 아동들은 더 넓은 울타리 속에서 성장한다. 지역 아동센터와 과연전문가, 보호자가 서로 협력하면 아동은 '혼자 버텨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자라는 아이'가 된다. 실제로 부모 교육과 맞춤형 정서 지원을 병행한 사례에서는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뿐 아니라, 가족 관계의 긍정적 변화도 확인됐다.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아동들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걸음을 존중하며 곁에서 기다려주는 것이다. 조금 느린 길 위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 보호자와 과연전문가, 지역 사회가 그 길을 함께 걸어줄 때 아이들은 자신만의 속도로 꽃을 피울 수 있다.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은 미래의 주체이다. 느린 속도는 한계가 아니라 더 깊은 성찰과 단단한 성장을 가능케 한다. 그들의 성장은 곧 우리 사회의 희망이며, 함께 만 들어갈 더 따뜻한 내일의 증거가 될 것이다.

## 기고



조 영 인  
조인애드컴·조인출판사 대표

행사를 기획하는 일은 때 순간이 전쟁이다. 수백 명의 인파, 화려한 조명, 터져 나오는 음향 속에서 나는 1분 1초를 다투며 현장을 지휘한다. 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이 일이나의 본캐(본래 캐릭터)라면, 일이 끝난 뒤 돌아와 조용히 텍스트를 만지는 출판사 대표로서의 삶은 나의 부캐이자 안식처다.

가장 시끄러운 곳에서 일하는 내가, 가장 조용한 종이책을 만드는 일을 병행한다고 하면 주변에서는 의아해한다. "요즘 책이 팔리기나 하나?"는 걱정 섞인 편찬도 듣는다. 하지만 최근 출판계에 날아든 낭보(朗報)는 나의, 그리고 우리 모든 작은 출판사들의 고집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다. 바로 거

## 위대함은 작은 곳에 숨어 있다

대 자본이 아닌, 어느 작은 출판사가 번역하고 출간한 책이 2025년 노벨문학상을 거머쥐었다는 소식이다.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헝가리 작가 '크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그의 대표작 *(시판뱅고)*는 문단 구분조차 없는 난해한 문체와 방대한 분량 때문에 대형 출판사들이 선뜻 손대기 힘든 책이었다. 하지만 국내의 한 작은 출판사(일마)는 상업적 셀프 대신 '문학적 가치'를 믿고 지난 10여 년간 묵묵히 그의 책을 평냈다. 모두가 '지금 당장 팔리는 책'을 계산할 때, 이들은 '오래 남아야 할 책'을 선택했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이 아닌 '안목'의 승리가 아닐까.

여성 기업인으로서, 그리고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번 사건을 '다양성의 승리'라고 부르고 싶다. 모두가 화려한 메인 무대만 바라볼 때, 조명 꺼진 무대 뒤편에서 묵묵히 팜 휘는 스태프들이 있기에 행운이 아가 될지도 모른다.

서점에 가거든 베스트셀러 코너만 보지 말고, 구석에 꽂힌 낯선 출판사의 책을 한 번쯤 꺼내 보시라. 어쩌면 당신은 미래의 노벨상 수상작을, 혹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문장을, 그 작은 책 속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는 행운이 아가 될지도 모른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오피니언

## 本土 説

## 광주 구청장 지방선거 전략공천 없다는 민주당의 약속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입지자들은 출판기념회 개최, 주민 접촉면 확대 등으로 인지도를 올리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일각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운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더 치열한 광주·전남에서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최근 광주 기초단체장 선거구에 '여성전략특구'를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다.

일단 광주시당이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지역위원장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일부 국회의원이 여성 구청장 선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5개 구청장 가운데 20% 범위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 뒤늦게라도 혼란을 피하게 됐다.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은 공정경선, 혁신공천에 올인하고 있다. 모든 출마 예정자가 등장한 진짜 축제의장을 만들어 최종 후보를 뽑아야 하는 것이다. 여성 또한 배려가 요구되는 청년, 장

애인 등과 함께 가산점을 받는 구조가 작동하는 상황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민주주의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특정 성별만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명백히 합정권을 박탈하는 처사다. 선택권을 가로막는 비민주적 행태에 다르지 않다.

개인의 역량과 비전, 도덕성 등을 철저히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마땅히 걸려야 하겠으나 경선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실제로 다자 대결이 예상되는 곳은 조별 예비경선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제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 대표성을 구실 삼은 기득권 나누기, 제 사람 심기는 사라져야 할 폐단이다. 실질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을 절대 망각해선 안 된다.

광주지역 각각의 선거구에서 정당하게 경합한 뒤 승복해야 한다. 호남은 민주당 빗발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다. 저마다 공천장을 받기 위해 경선에 사활을 걸었다.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정부'다. 최종적인 결정권은 시민에게 있다. 여성 특구 뿐만이 아니다. 전략공천은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 조만간 확정될 중앙당의 공천 룰에 관심이 쏠린다.

## 이주배경인구 10만명 전남 선제적 정책 추진은 필수

광주·전남의 이주배경인구가 15만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남은 지난해 11월1일 기준 총 9만9천546명으로 집계됐다. 광주는 5만864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번에는 사활린 등 본인이나 부모가 국적 판정을 받은 사람, 해방 이후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과 그 자녀까지 포함했다. 외국인 주민 자녀 연령도 만 18세 미만에서 전 연령대로 조정, 보다 포괄적으로 정비됐다.

이주배경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기존 행정안전부 통계보다 범위가 확장된 영향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에는 고용허가제 확대가 취업 인력 유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남은 귀화·인자자, 이민자 2세 등 내국인은 2만8천610명, 외국인은 7만988명에 달했다. 전남 전체 인구 17만9천610명 중 5.6%였다. 전국적으로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천명으로 총인구(5천180만6천명)의 5.2%를 차지했다. 생산연령층과 수도권 집중 현상 속에

인구 구조가 다문화화와 이주배경으로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영암군을 비롯해 비중이 높은 전남지역도 눈길을 끈다. 영암은 총인구 6만명 가운데 1만3천명으로 무려 21.1%에 달한다. 완도군은 14.1%로 791, 진도군은 13.3%로 9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는 100명 가운데 5명 정도가 본인 또는 부모 기준에 적어도 한 명이 이주배경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전남은 10명 가운데 2명이 아깝다.

저출산·고령화로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는 전남 지자체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적극적인 이주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당면한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다. 유일한 인구 증가의 원인인 만큼 이들이 없었다면 더 빠르게 감소했을 수 있다. 이미 주요 구성원이 됐다. 일각의 혐오, 차별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나와 다른 없는 주민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맞춰야 한다. 국가데이터처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는 지역 생존을 위한 선제적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정부 역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 그래픽 뉴스

## 취업준비생 취업 인식도

## 조사 결과

2025년 10~11월 전국 4년제 대학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자 (유예·정장 포함) 2,492명 대상 조사

## 구직 활동 실태



## 구직에 소속적인 이유

445명 응답



## 연합뉴스

자료: 한국경제인협회